

2023년 10월 6일

세계인권도시포럼에서 ‘연령주의와 노인빈곤’이라는 주제가 다뤄진 것이 반갑지만, 두 문제 모두 제기된 지는 오래되었으나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란 점, 각종 지표가 악화되는 현상에 머문 점에서 마음이 아픕니다. 인권도시 안에서 연령주의와 노인빈곤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자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봉책을 넘어 공적제도의 미숙함과 연령차별로 대별되는 연령주의라는 심화된 질문을 제기해주신 두 발표자에게 많은 점을 배웠으며 감사한 마음을 표합니다.

소준철¹⁾

[김태완의 발표에 대한 토론거리]

1. “저출산 고령화”라는 개념들은 우리의 대안을 합리적으로 이끌어 가는가?
2. 소득과 자산에 있어 불평등 문제는 지속 중. 다만, “양극화와 격차가 있다”라는 입장을 넘어선 심화된 데이터의 필요. 노인빈곤 현황에 있어 “계층별 위험”에 대한 접근이 더 필요함. “계층별 사망 불평등”에 대한 접근이 더 필요함. 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의 사망력 변천과 사망 불평등: 진단과 과제」(2021)과 같은 연구를 기초로 심화할 필요가 있음.
 - 즉, “어떻게 위험한가” 뿐만 아니라 “누가 위험한가” 역시 중요한 내용임.
 - 물론 “어떻게 위험한가.” 1) 양극화가 아닌 2) 분위 간 “격차”의 문제라는 지적은 중요함. 3) 이것이 고립감, 자살 등으로 이어진다는 경고 장치로 이어지는 맥락은 밋밋함.
 - 발표자의 “누가 가난한가”라는 문제제기에는 충분히 동의함. “연령이 높아질수록”, “혼자 생활할수록”, “남성에 비해 여성이”, “충분한 노후소득보장 수단이 없을수록”이라는 문제제기는 (초고령화사회의 위기에 비해 “평면적인 건 아닌지? 즉, 연령, 가구 형태, 성별, 소득의 지표는 경향을 살피는데 중요한 요소이나, 문제를 살피는 도구로는 너무 큰 것은 아닌지.
 - 흥미로운 지점. 9쪽. 노인연령별 빈곤율 추이. 발표자가 보려고 하는 “변화율”은 각 연령별 (서로 다른 코호트에 있어서의 변화율도 흥미로우나) 각 코호트가 연령이 늘어날수록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무척 흥미로움. 여기에는 1936년생에서 1953년생까지의 변화가 보임. 2011년 당시 65세(1946년생) 36.9%는 2019년 73세 44.1%로 증가. 2012년 당시 66세(1945년생) 34.7%, 2019년 당시 74세 44.5%로 증가, 2011년 당시 66세(1944년생) 36.2%에서 2019년 당시 54.4%로 증가. 1944년생의 경우는 상대적 빈곤율이 18% 가량 증가하는 이례적인 상황. 여기서 새로운 질문이 필요. 8년 만에 왜 특정 코호트의 상대적 빈곤율이 급증했는가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은지. 1943년생인 2011년 당시 41.7%에서 2018년 52.1%로 증가. 사실 1942년생부터는 50%대 이상인 상황에 대한 특수한 코호트 빈곤율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건 아닌지? 정리하자면, “노인” 대책이 아니라 “코호트”, “빈곤율”에 따른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듭.
 - 이러한 수준에서 ‘공적연금 유무별 노후소득 수준’에 있어, 공적연금의 부존재를 보완할 방법이 필요함.
3. 노후준비 부족의 이유는 사적체계 중심이었던 과거의 복지 ‘관습’과 사회경제적 불안정성

1) 이화여자대학교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 박사후연구원

이 이유. 다만, 여기서 1) 국민연금(22%)의 연령에 따른 가입 제한을 넘어 사정에 맞는 가입 여부를 늘려야 하는 건 아닌지? 왜 국민연금에 기초연금을 합한 값으로 ‘수급 사정’이 좋은 점만 드러내는지는 의문임. 2) 기초연금의 확대 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에는 공감.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부양의무자 폐지를 통해 수급층이 증가했으며, 극빈자에 대한 지원 확장은 필요하다고 봄.

— 문제는 차상위계층. 그러나 이들에게 “노동” 중심의 취로사업 방식의 “노인일자리 사업”만이 유일한 지원책이라는 점은 안타까움. 단순히 낮은 급여 문제만을 제기하기에는 “노인일자리” 바깥에 존재하는 차상위층 노인들에 대한 대책은 무방비 상태임.

4. 기초생활보장과 (차상위계층을 위한) 긴급복지지원제도라는 이중구조에 있어, “긴급복지 지원제도”가 차상위계층 등 가운데 일시적 ‘소득’ 및 ‘자산’의 부재로 인한 위기 상황을 극복할 여지가 되는지? 민간 재단법인 등과의 연계?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어떻게 손봐야 하는지, 23쪽 발표자의 표현대로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노인일자리사업, 국민연금, 기초연금의 역할 제고와 빈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23년 기초생활분야 예산은 작년 추정 대비 7.1% 증가하였고,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각각 17.9%, 28.8% 증가했습니다.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 5.47% 인상과 수급자 규모의 증가분에 따른 인상이나 실질 급여인상분은 올해와 동일한 3.65%에 불과합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4.1% 증가했으나 기준중위소득 인상 등으로 인한 자연증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활사업은 0.4% 감소했고, 여전히 최저임금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인상은 자연증가분에 지나지 않는 수준으로 이를 통한 저소득계층 삶의 질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의 피해로부터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재유행의 위험성이 여전히 가운데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이 전액 삭감되고, 긴급복지 지원 예산을 예년 수준으로 책정한 점은 우려스럽고, 정부의 약자 복지 강화 예산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참여연대)

5. 많은 정책이 왜 현재 50대와 60대를 향하는 것인지 의아함. 뿐만 아니라 공적연금은 늘 재정안정을 염두해야 하는가? ‘미래 노인’을 위해야 하는가? 진짜 필요한 건 ‘현재 노인’이 아닐까. 생명표에 따르면 현재 74세 노인은 14년의 기대수명이 남아있다. 적어도 이 기간 중 일부라도 존엄성있는 나이들을 경험하게 해야 하는 건 아닐까.
6. 공적연금과 초고령사회의 노동을 고민해야 한다는 강박감은 알겠지만, 현재 전체 자영업자 555만 명 가운데 60세 이상 자영업자가 193.3만 명(21.4%,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부가조사>)으로 늘었다. 이는 노인들이 노동시장에서 자리잡을 수 없다는 기대아래서 어느만큼의 비용을 활용하는 자구책이다. 여기서 기존의 직업훈련 방식의 복지서비스는 어느만큼 영향을 미칠까?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즉, 국가, 사회복지서비스는 노동시장과 복지서비스 사이에서 무얼할 수 있는지 명확히 역할을 재검토해야 한다.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노인들의 빈곤한 사정과 50+로 일컬어지는 은퇴후 일자리 훈련은 분리해야 한다고 말하기 위해서다.
7. 일하는 노인이 늘어나는 문제에선 산업구조에 있어서 어떻게 요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 선진국의 가난한 노인, 선진국의 일하는 노인이란 용어는 한국사회 전반을 소개하는 상황.

— 일할 때, 어떤 사회보장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 1) 국민연금: 개시 연령, (주택연금 등을 통한 보완? 필요하다면 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한 지원), 2) 고용보험 내 실업급여의 지급 가능성, 3) (상해보험을 넘어) 산재보험의 가입 필수화, 4) 건강보험 등을 연령에 관

계없이 어떻게 가입과 혜택을 동일하게 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

8. 정리하자면 문제는 ‘위기 노인’을 어떻게 발굴하고 대처할 것인가가 아닐까. 소득을 넘어 서비스를 다시 넘어 “소득을 넘어 생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개인의 노화, 1인 가구, 자신의 질병 등으로 인한 장애, 타인을 돌보는 사정, 생업이 어려워지는 경제적 위기 등에 대한 각급의 대처가 필요하다.

[이해나의 발표]

9. 연령주의, 노년층에 대한 연령차별의 심화. 사회적 결속, 노인의 능력이 가진 가치의 절하, 나이가 사회적 건강에 미칠 영향, 이러한 점을 위해 국민국가가 법/제도적으로 완화시켜야 할 차별 중 하나로 제안된 상황. 즉, 제도적으로 연령에 따른 차별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라는 새로운 문제제기가 필요.
10. 차별의 지평은 교육, 일자리(=소득, 경제적 차별), 건강(=기후위기로 인한 위험, 기후 불평등), (재개발과 사회변동으로 인한)도시(라는 공간적 차별)에 이르기까지 넓은 사정. 여기에서 비단 직장 내 연령차별과 재취업의 어려움. 연령이라는 보이지 않는 유리 천장을 어떻게 파훼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함.
11. 노인들의 종사상 지위, 취업구조에 대한 대대적인 재편이 필요함. 연령에 따른 계약 수준의 차별을 어떻게 무너트릴 것인지 고민이 필요함. (더구나 자동기계화되는 현장 속에서 노인들이 떠맡은 임시직 서비스업의 문제 역시 새롭게 대두됨.)
12. 여성의 경우, 30대부터 노인이 될 때까지 쪽 임금의 감소함. 특정 시기의 지표도 중요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들이 경험하는 노동의 사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장기추적이 필요한 상황이기도 함. 그때서야 ‘고용 전과정’에서의 연령차별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도 생김.
13. 현재 취업시장, 혹은 노동시장에서 k-로 대표되는 ‘국제화’, ‘글로벌화’의 흐름에서 젊은 층 위주로 재편된 상황을 고민하면 상황이 복잡함. 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업종이 사회/서비스업(69.4%), 농림어업(24.7%)에 국한된 점이 문제. 이들이 적극적으로 종사했던 제조업의 경우, 6%에 불과. 애초에 노인의 경험을 되살린 노동은 현재 불가능한 상황. 더구나 제조업 역시 전통적 공장에서 자동화된 공장 기반으로 변화한 사정에서 노인의 역할을 상실한 상황이기도 함. 즉, 한국사회의 급속한 변동 속에서 노동자로서의 노인 역할이 상실된 상황이 문제임. 노인의 역할을 어떻게 회복하게 할 것인가, 의문.
 - 이런 상황에서 은퇴의 압박 정도의 심화는 불가피한 상황.
 - 즉, 산업계와의 적극적인 연대를 필요로 하는 법제도적인 제안이 필요.
 - 여성노인의 경우, 평생을 실적제와 같은 방식으로 존재해왔던 건 아닌지? 다른 전환이 필요함. 여성노인의 경우,
 - 또 하나 농촌노인은 어떻게 할 것인가? 가계 부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농업의 경우 49.5%가 65세 이상임. 이들은 어떻게 대할 것인가?
14. 핵심, 노인의 ‘자기연령주의’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는 노인이 스스로를 소외시키지 않을 방법이 필요. 하지만 이를 어떻게 가능케 할 것인가?
15. 나이를 어떻게 차별의 요인에서 벗겨낼 것인가. ‘나이’만이 차별의 대상인가. 진짜 문제는 급속한 변화와 변화에 대한 동의를 묻지 않는 사회가 아닐까? 오늘 제안에서 필수적인 ‘인권도시’의 흐름은 노인을 차별하는 도시의 변화까지 물어야 하는 건 아닌지 고민이 든다.

16. 현실적으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어렵겠지만, 켄 로치의 영화 속 ‘나, 다니엘 블레이크’의 주인공이 말한 것을 고민해야 한다. “사람이 자존심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라고 말한다. “자존심”을 잃지 않게끔 “자존감”을 갖게끔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17. ‘저부담, 저복지’의 패러다임에서 ‘중부담, 중복지’, 혹은 ‘고부담, 고복지’ 패러다임으로 변화를 (허울 좋게) 말하는 사회는 아닌가.